



산림은 神이 내려준 자연최고의 寶庫다

(보고)

관련기사 2·3면

산불로 산림이 망가지면서 지구촌의 새로운 파괴자로 등장했다.
환경과 기후 위기를 넘어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산불로 울창한 경북의 산림이 무차별 파괴됐다.
급기야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을 막아라' 라는 특명까지 내렸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이다.
산림이 황폐화됐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경북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1616억 면적 2만692ha

경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 도민 안전 재산 보호

경북은 산림악몽에 시달리고있다. 전국 '최다' 산불 발생지역의 오명 탓이다. 무려 213시간 동안 산림을 태운 3월의 초대형 울진산불이 그 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파괴되면서 복구에만 50년이 걸린다. 울창한 산림이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변했고 인명·재산피해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산불 악몽이다. 때문에 경북도가 산불 대책을 마련, 산림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최근 5년 산불피해면적 2만692ha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산불 피해 면적과 피해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9월)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산불 발생 건수는 2018년 496건,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9월말 기준 529건으로 모두 3403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면적은 2018년 894ha, 2019년 3255ha, 2020년 2920ha, 2021년 766ha, 2022년 2만 4797ha, 2023년 9월말 기준 4969ha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018년 485억8300만원, 2019년 2689억1000만원, 2020년 1581억4100만원, 2021년 361억2500만원, 2022년 1조3462억 7600만원, 2023년(9월 기준) 2840억9100만원으로 모두 2조1421억2600만원으로 확인됐다. 산불 건수는 경기도가 7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565건, 강원이 381건, 경남이 375건, 충남이 261건, 전남이 2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경북이 2만692ha로 많았고 강원 9496ha, 충남 2800ha, 경남 1985ha, 전남 1060ha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산불 피해액은 경북이 1조1616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 5795억1100만원, 충남 1614억4000만원, 경남 936억6100만원, 전남 590억 9400만원, 울산 308억7700만원 등의 순이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사 실화가 10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671건, 원인 미상 497건, 건축물 실화 253건, 담뱃불 실화 2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경북 3년간 전국 산불 피해면적 63%

경북소방본부는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 일대에서 대형산불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했다. 훈련은 안동소방서 등 인근 8개 소방서와 긴



급구조지원기관(한전·통신사), 의용소방대, 주민자율진화대 등이 참여했다. 산불전문가 등과 함께 실제 상황과 유사한 장소에서 산불대응력을 높이고 진화 전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고접수 후 신속한 초기대응·119산불특수대응단 야간 진화·인근 소방서 자원 동원·시설물 보호 및 도심 불길 확산 저지 등을 실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2년 3월 213시간 동안 산림을 태운 울진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이전 7년간 연평균 0.7회 발생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4.6회 발생해 약 6.6배 증가했다. 피해면적은 36배, 재산피해는 23배 늘었다. 대형산불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100ha(약 30만 2500평)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경북지역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다. 경북소방본부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전국 및 경북지역 산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면적은 1만5201ha로 전국 피해면적(2만2474ha)의 67.6%에 달했다. 2021년과 2020년에도 각각 442ha(전국 673ha)와 2004ha(전국 4339ha)가 불타 전국 피해면적의 65.6%, 46.1%를 차지했다.

반면 2017~2019년 경북 산불 피해면적은 40~60ha로 전국 피해면적(7910~2570ha)의 2~7%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경북의 산불 피해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봄 엘니뇨로 고온 현상이 예고돼 러시아산 진화 헬기 부품 조달 문제로 헬기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을 완벽하게 진화하기 위해 종합 훈련을 한다.

■ 경북소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시행

경북도 소방본부는 2월29일까지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6대 전략에 21개 과제를 지정해 운영한다. 소방 안전 대책은 △숙박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 △3층 이상 고층건축물 162곳에 대한 지도점검 △지하층에 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화재 안전조사 등이다. 겨울에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도내 공동주택 2730곳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와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피난 행동 요령 및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피난 시설 사용 방법 교육·홍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유도 등을 추진한다. 경북소방본부는 "겨울철은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우리 생활 공간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적극적인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 추진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헬기 통합출동, 대구·경북 도입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최근접·최적정 소방헬기를 투입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 대구·경북에도 도입된다.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하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확대해 1월 중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헬기 조종사 및 정비사들로 추진단을 꾸려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 등 활동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된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출동 사업을 대전·충북·충남·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했다.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를 신속히 출동시키기 위해서다. 통합출동으로 인해 소방헬기 출동 시간 및 거리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운영 기간 4개 시·도의 통합출동 44건을 분석한 결과 단축 시간은 총 610분, 단축 거리로는 1천828km로 집계됐다. 출동 1건당 평균 14분이 감소되고, 거리로는 41.5km가 단축된 셈이다. 운항 시간 감소로 연료비 및 소모품 교체·부품 수리 등 헬기를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달 안으로 통합출동 시범운영 지역을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제주 등 영·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한다.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정비 등 신속히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영천시 9가지의 즐거움

영천 9경

여유 행복

9가지의 즐거움

영천시

은해사

입고서원

보현산천문대

치산관광지

보현산댐짚와이어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댐벚꽃배리길

영천한의마을

별별미술마을

이철우, 산림정책 대혁신 안전 행복한 산을 돌려준다

첨단장비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 새 정책 산림재난 안전한 경북실현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북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지만 산이 도민들에게 위협적이고 불편한 곳이 아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으로 산림정책의 대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산을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불 환경파괴

산불은 기후 영향을 넘어 환경을 파괴한다. 불길에서 나오는 미세먼질(PM2.5, PM10), 유기 에어로졸, 그리고 블랙 카본(black carbon)을 포함한 다수의 오염 물질을 대기로 방출된다.

블랙 카본은 식물, 나무 등의 바이오투아스와 석연료와 같은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 생성물을 말한다.

대형 산불은 식물들을 태우고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야생동물의 식량원을 고갈시킨다.

산불의 여파로 토양 표면이 노출돼 토양 침식, 퇴적물 유출,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2차 재난을 유발한다.

한반도는 봄철 가뭄의 심화와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형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한다.

■경북 산불방지대책

경북은 2022년 봄철에 올진산불을 비롯한 6건의 초대형 산불로 1만5674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유례없는 산불피해로 최근 기후위기에 의한 산불의 대형·다발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22년 봄철 대형산불 피해현황을 보면 △영덕 2월15~17일(3일) 405ha △고령 2022. 2월 28~3월1일(2일) 545ha △울진 3월4~13.10일(10일) 1만4140ha △봉화 2022. 4월5일~6(2일) 130ha △군위 2022. 4월10~12일(3일) 225ha △울진 5월28~29일(2일) 229ha이다.

도는 2022년도 산불피해를 반년교사 삼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행정력을 총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도(2022년)와 비교, 건수 대비 35% 감소(23년 76건, 22년 115건), 면적 대비 97% 감소(23년 584ha, 22년 17,409ha)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3 지방자치단체 산불대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산불예방 계몽운동 현장라례이 켈린지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운영 △산불기동단속반 운영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실무교육 △산불발생 시군대상 재정조치 등 자체적인 산불방지 정책을 펼쳤다.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은 산불원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불법 소각행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223건(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산불예방 계몽운동 현장 이여가 켈린지(사람의 능력기술을 시험하는 뜻)는 경북지사와 도내 23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참한 전국 첫 광역단위 산불예방 계몽운동이었다.

일선 시군 단체장의 산불의 위기경각심을 고



취,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주축하게 작용했다.

도청 사무관(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 휴일없이 현장계도를 하는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제’는 경북도가 최초로 시행, 전국적으로 전파한 산불예방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봄철 산불방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경북을 목표로 발품을 팔고 있다.

올해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1곳, 12억원)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1곳, 11억원) △도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3억원) △산불대응센터 설치(2곳, 8억원) △산불안전공간 조성(2곳, 2억4200만원) △산불소화시설 구축(2곳, 3억1000만원)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이번 아니다.

도는 △첨단ICT 및 자율비행기술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화재센서, 열화상 CCTV, AI답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인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22개 시군의 산불발생 실시간 상황 관리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도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등 주요 신규사업으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체계를 구축한다.

■산사태방지

경북은 지난해 6-8월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한 11개 시군에 산불 피해액 269억원(북구액 451억원)과 산사태·토사유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21명·실종 2명 등 역대급 자연재해를 입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피

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았다. 주요 추진내용은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 △기후위기 산불재난 인명피해예방 전문가 초청 특강 △인명피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교육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및 조사 △산악기상관측시스템 등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운영 등이다.

도 자체적으로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 혁신TF를 8월부터 발빠르게 구성 운영했다.

도는 △산불안전 대진단 및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 △산방사업 활성화 및 사방시설 품질강화 △산사태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략(산악기상망 확충) △예-경보 체계 개선(스마트 재난방송 도입 확대 등) △이재민 보호 선진화(리조트, 연수원 임시거주시설 지정) 등 15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산사태 대응정책을 수립했다.

무엇보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산사태 재난원인조사반’에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반원으로 직접 참여했다.

산사태 예방, 대응,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그 결과 행안부의 ‘토사제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산림청 소관 14건(전체 20개)의 개선과제가 선정됐다.

경북도 산림자원과는 올해 산사태 방지정책에 집중,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를 실현한다.

주요 내용은 △산불안전 대진단(5억원) △산방사업 대폭확대 추진(산림유역관리사업 11곳 등 478억원) △산사태 예방교육(6000만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확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정비 △산사태 위험지 관리강화법

개정 건의(산사태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산림연접 건축행위시 허가조건 강화) 등이다.

■경북 산림복지 르네상스 속도

경북도가 올해 도시숲과 실외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립산지생태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산림복지 르네상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경북도는 올해 추진할 4개 분야의 산림복지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북도청산도시 천년숲은 경북도청산도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9.2ha 규모에 조성됐다.

산림청 주관 ‘2023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도시숲’에 선정됐다.

이 곳은 2018년 전국 최초의 산림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30년간 약 1950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 서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경북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된 경북천년숲정원은 사업비 137억원을 들여 경주 남산 자락에 있는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내 33ha의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곳은 지난 해 4월 개장한 이래 4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각종 SNS에 소개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은 숲 조성에 힘을 기울여 올해는 도시숲 16곳 95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12곳 124억원, 도시바람길숲 1곳 20억원, 실외정원 4곳 20억원 등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한다.

경북 구간은 116억원을 투입해 6개 시군(영주,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울진)에 걸쳐 275km다.

지난해 시범구간인 울진 망양정에서 한티재까지 ‘우리금융 ESG사업’ 8억원이 투입돼 금강송과 계곡이 어우러진 숲길 20km가 조성됐다.

도는 트레킹 수요자의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트레일센터의 필요성과 건립 타당성을 산림청, 기재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비 40억원의 이 센터를 유치했다.

이 센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조성된다.

도는 2022년 발생한 울진 대형산불 피해지역 265ha에 대해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100여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산림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402억원을 들여 5년간 산림복원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담당할 국립산지생태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는 국비 17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4년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에 복지시설 나눔숲 5곳, 무장애나눔길 3곳, 무장애 도시숲 1곳 등 전국 최다인 9곳이 선정돼 43억원(총사업비 62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복원 수익금 재원을 이용해 사회 경제적 소외·배려 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공간 주변에 녹지환경을 만든다.

숲속 체험 기회를 확대해 숲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숲을 즐기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예방 등 800억원 투입

최근 산불 발생이 집중된 경북도가 올해 숲가꾸기에 8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가 산불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산림 2만9204ha(2억9204만㎡)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사유림 경영 활성화 등을 진행한다.

우선 풀베기·덩굴을 제거하며 조림지(1만3335ha)를 가꾼다.

휴양림·수목원에 있는 나무 등 공익림(3530ha)과 조림지에서 자란 큰 나무(3101ha)도 돌본다.

산불에 취약했던 산림 8035ha에는 대규모 산불 예방 사업을 한다.

최근 수년간 경북 지역에 산불이 집중된 점을 반영한다. 2022년(4700ha)보다 규모를 2배 가량 늘린 것이다.

예산도 189억8437만원에서 305억728만원으로 61% 늘린다.

국회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면적은 1만5201ha로 전국 피해면적(2만2474ha)의 67.6%에 달했다.

2021년 442ha(전국 673ha), 2020년 2004ha(4339ha)가 불에 타 전국 피해 면적의 각 65.6%, 46.1%를 차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북 산불 피해가 급증한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분석한 바 있다.

산불의 기후학적 위험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경북 지역은 위험도가 과거보다 30~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예방 대상지에는 불에 잘 타는 소나무는 배어 내고, 활엽수 등을 새로 심는다.

소나무 잎 1g을 태우면 3400cal, 참나무는 2500cal의 열량이 발생한다.

소나무가 활엽수보다 불에 더 잘 타고 더 크게 번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숲 가꾸기는 산지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보조 사업이다.

다만, 사업 완료 후 5년 안에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면 사업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희망하는 산지 소유주는 산림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산림부서 등에 신청하면 된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숲 가꾸기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산불이나 산림 병충해 등 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목 생물환경이 개선되고 목재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작년 대구 취업자 전년대비 1만9000명↑...경북↓

작년 12월 대구 고용률 57.9% 경북 12월 취업자 2천명 줄어

고용시장은 여전히 칼바람이다. 기업들의 경기 불안감이 고용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원하는 일자리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의 개선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2000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계획인원은 55만6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만1000명(12.7%) 감소했다.

▣ 작년 취업자수 284만명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0년(-21만8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32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4년(59만8000명) 이후 2015년(28만1000명), 2016년(23만1000명), 2017년(31만6000명) 20만~3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다가 2018년(9만7000명) 크게 둔화했다.

2019년(30만1000명)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은 바 있다.

이어 2021년(36만9000명)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2022년(81만6000명)에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오른 69.2%를 기록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5.5%)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전년보다 0.2%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5000명(1.0%) 늘었다.

증가폭 또한 전월보다 커졌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5개월 만에 가

장 적게 늘었다.

이후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30만9000명)과 10월(34만6000명) 증가폭을 키웠다가 11월(27만7000명) 다시 축소됐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 작년 12월 대구 고용률 57.9%...

지난해 12월 대구의 고용률은 소폭 하락하며 2개월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1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1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00명(0.2%)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1만1000명(5.4%), 일용근로자는 4000명(6.7%)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4000명(5.6%) 증가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명(0.6%) 감소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동일했다.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9.3시간으로 0.3시간(0.8%)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8.7%) 감소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

했다.

시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2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조사 대상 주간으로 선정해 그다음 주간에 조사 실시한다.

▣ 경북 작년 12월 취업자 2천명 줄어

지난해 12월 경북의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줄었지만 고용률은 상승했다.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보다 15세 이상 인구의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1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6000명), 농림어업(2000명)에서 증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8000명), 제조업(1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만3000명(3.5%), 일용근로자는 2000명(4.6%) 줄었다. 임시근로자는 6000명(3.5%)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2000명(2.9%), 무급가족종사자는 5000명(5%) 늘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하며 4.3%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9.9%) 증가했다.



고용률은 57.9%로 전년 동월에 비해 0.6%포인트(p) 하락하며 전월인 11월 59%에 이어 2개월 연속 50%대 고용률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7%로 전년 동월 대비 0.2%p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1만명), 농림어업(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9000명), 제조업(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00명)에서 감소했다.

했다.

다만 전월인 11월과 비교하면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늘어났다.

실업자는 11월 3만3000명 대비 1만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1월 2.6% 대비 1%p 상승했다.

대구시 15세 이상 인구는 20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5000명(1.2%)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2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0.3%) 줄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

월 경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4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남자는 1만4000명(1.6%) 감소했지만, 여자는 1만1000명(2%)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한 61.8%로 집계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68.2%다.

전월인 11월과 비교하면 실업자는 2만2000명 대비 4만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1월 1.5% 대비 2.8%p 상승한 수치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사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2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조사 대상 주간으로 선정해 그다음 주간에 조사를 한다.

조여은 기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4전5기 신화 성공 김하수 청도군수 갑진년 청도 건설

새해 사자성어 개신창래(改新創來)
'새로운 길 열어 미래 창조하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긍정·도전적인 정신 재무장 의지



갑진년 청룡의 해 김하수 청도군수의 각오는 남다르다. 김 군수는 2024년은 군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위대한 영광으로 나가는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그는 "우리와 공존의 가치를 담은 더 큰 희망, 더 큰 행복을 주는 청도군의 잠미소빛 청사전을 내놓았다. 그래서 그가 내건 사자성어는 개신창래(改新創來)다. 개신창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뜻이다. 다시말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도전적인 정신 재무장이다. 김 군수는 정치인생 32년만에 4전5기 신화를 이뤄낸 업적인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 청도는 가슴에 품은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김 군수는 새해부터 신발끈을 바짝조여매고 청도 부흥을 꿈꾼다. 청도 성공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긍정 추진에 탐과 열정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다. 김 군수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근거한 민원처리 절차를 준수, 민원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원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5대 비전 7대 중점 추진전략

김하수 청도군수는 새해 첫날 덕질산 생태공원에서 '2024년 갑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갖고 군민들과 함께 희망찬 첫 걸음을 시작했다.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참석자들은 '군민 모두가 힘나는 새로운 청도'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김 군수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5만 군민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오직 군민만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군수는 농업·복지·경제·관광·교육도시 5대 비전 7대 중점전략을 세웠다. 사통팔달 교통망 기반 관광명소화·첨단기술 활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은퇴자·청년·한인상공인 입주 돕는 명품 전원주택단지 '유빌리지' 조성한다. 민선 8기 청도군의 군정 구호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이다.

5대 비전인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도시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 도시 △성장하는 상생의 균형도시 △매력적인 고품격 관광도시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5대 비전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행복 도시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도시 △농업대전환을 통한 부자 농촌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 청도 △상상하는 활기찬 지역경제 도시 △균형발전의 미래도시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보장과 군민 참여 공감 도시 등 7대 중점 전략과 세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평생교육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청도 인적자원개발 학과 운영 및 행복아카데미와 여성대학원 개강, 온누리 대학과 마을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등 평생교육 기반 확대와 군민 의식 선진화에 힘을 쏟는다.

인재 양성원 운영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도군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학습 생태계 구축으로 명품교육 도시로 만든다.

청정자연과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청도를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로 조성한다.

7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산림치유 힐링센터 건립, 지역의 빼어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성곡림 생태관광벨트 등 대규모 워라다 지와 종합레포츠 단지 조성 등 특색있는 삼정의 고장 청도를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기초를 다진다.

지역 문화자원인 청도 9경의 스토리텔링 등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1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1300만 명의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도시로 육성한다.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

농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에 농산물의 가격불안, 농업소득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청도는 이를 극복하고 선제로 대응하는 농업 대전환으로 부자 농촌을 만든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친환경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 과실 전문 생산단지 확대 조성 등과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력 수소를 건립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에 나서고 차세대 농업 리더 양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어르신들에게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드림생활봉사센터를 개소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등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보듬는 복지를 실현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농민 재활사업 지원 확대, 외래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7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유수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원스톱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청도만의 먹거리촌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청도만의 먹거리촌도 조성한다. 명품 전원주택단지인 '청도 인터내셔널 유빌리지' 조성으로 은퇴자와 청년층·한인 상공인들의 입주를 유도한다.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청도 시대를 실현한다. 미래형 도시 디자인과 도시재생, 농촌협약 등으로 원도심과 농촌 활력 사업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과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망 청도 연장 추진, 대구-청도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도 도입, 청도역사 환경개선, 마령재 터널 조기 개통, 청도매전-울주상북 간 터널 개설 추진 등 지역발전의 핵심과제인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로 청정 청도의 자연을 지킨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재난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노후 CCTV 교체, 군민 안전 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연 진화적이고 안전한 하천을 정비한다.

동창전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가속화로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군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군정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군민 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고객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한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역점

청도군의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민원서비스'가 지난 1년 대비 더욱 좋아졌다라는 의견이 10명 중 7명(6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더욱 힘을 쏟는다. 민원인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기 운동', '민원 응대 표준 매뉴얼 배포'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전문 CS 교육과정을 강화해 왔다.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IT 기술의 조기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 군수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국어 음성 민원안내 AI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3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25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10월 도입했다.

김 군수는 방문객 중에 어르신이 많은 청도군의 실정을 반

영해 예의 바르게 먼저 인사하고, 표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기능을 로봇에 추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이 청사 입구에서 로봇의 인사를 받고 함박웃음을 짓는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주요 민원 질의·답변 2,000여 개를 입력해 완성한 '음성인식 민원안내', '청사안내', '청도군 주요 관광지 안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김 군수는 "로봇의 콘텐츠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실시간 진화하는 유기적인 민원 응대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청도군의 상징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민원응대유니폼 도입

청도군은 지난해 상반기(4-5월), 하반기(11월)에 각각 2023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7개 면사무소에서 운영, 하반기 현장민원실은 농번기를 피하기 위해 11월에 운영했다.

교통 소외 지역인 운문면과 각북면에 운영 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농업인과 민원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청도군의 섬세한 행정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방문객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민원실의 기존 고객컴터를 활용해 미니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월명의 소파에서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군민들이 독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늑한 힐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인바디(in-body) 기계 등이 배치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방문객들의 민원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청도군의 민원서비스환경 개선을 향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원실 직원들이 외인 색상의 통일된 민원응대복을 입은 모습은 신선한 느낌을 제공한다.

민원응대가 더욱 전문적으로 비춰지며, 심지어 민원복은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

민원실 직원 중 한명은 "통일된 복장을 입으니 소속감과 책임감이 들어 민원처리에 더욱 정성을 쏟게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여은 기자

‘대구 골목상권 감감’... “골목상권 101곳 살립시다”

대구시, 2024 제2도약 시기 골목경제 활성화 각계각층 전문가의견 청취 추진방향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앞장

밤이 되면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상권’ 불야성이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모임 문화,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여파다.

극성수기로 꺾이는 연말연시 조차 문을 일찍 닫는 가게들이 부지기수였다.

대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 들안길조차 일찍 불이 꺼져 있었다.

인건비, 공과금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이다.

정부 올해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내수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골목상권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의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2003년(-3.1%) 이후 20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내수 회복세가 늦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해소가 가장 경제적이다. 간단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경제 뽀개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들이 지적됐다.

먼저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는 반면, 숙박업소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식육축색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육점서 곰탕·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식육축색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요

건 완화 필요성 △수제맥주 제조 재료의 허용 품목 확대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역시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지금, 강력한 규제혁신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골목경제 활성화

대구시가 골목상권 살리는데 총력전이다.

지난 9일 산격청사에서 시, 구·군 및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정부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21년부터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으로 101개 골목상권이 조직화(상인회 구성)됐다.

골목상권 내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상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상권을 알리고 있다.

상권 브랜드를 활용한 상권 디자인 개선 및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을 특색있고 매력적인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상권 컨설팅 및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생력을 갖춘 골목상권이 되도록 변화를 꾀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골목공동체 지정 기준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문가 회의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시즌2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도시재생·문화예술·디지털 등 소상공인 지원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대구시의 골목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유통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역량, 기술이 새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

됐다.

나뉘주기식 지원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골목상권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골목상권의 성공 사례가 타 상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마중물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구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2월부터 2024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간 교류 확대 및 민관 협력으로 2024년이 골목경제 활성화의 제2도약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골목상권 5개년 발표

대구시는 2021년 앞으로 5년간 이룬 골목 120개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골목상권 살리기다.

당시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조직화한 뒤 자생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통해 5년간 120곳을 ‘김광석 골목’, ‘안지랑 골목’ 등과 같은 곳으로 육성한다.

일시적, 단발성 자금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골목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대구형 골목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2019년 기준 대구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85.6%(전국 82.9%), 종사자 수는 36.5%(전국 30.8%)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기반 조성과 조직화, 상권 안정화, 특성화와 자생력 강화라는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골목 경제권을 도출한 뒤 법안화와 조직화를 돕는다.

조직화된 골목상권에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브랜드 개발과 기초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 골목상권별 테마에 따른 스토리를 발굴한다.

상인 리더를 육성,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해 특화거리로 조성한 뒤 디자인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골목상권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 경험이 많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골목경제 닥터’를 운영한다.

골목 상인회, 시·구·군 관련부서, 도시재생센터 등이 참여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꾸려 사업 방향 설정과 자문에 나선다. 조미경 기자



희망특별시 포항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 + 1(철강고도화) ⊙ 일자리 1,000개 창출, 10,000개 양질 일자리 ⊙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 관광 1,000만 관광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 체육 집안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p>활동해 경제수도 도시</p>	<p>친환경 생태 도시</p>	<p>100세 행복도시</p>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7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민생 해결 총력”

경북도의회가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배한철(사진)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 책무는 민심을 반영한 집행부의 정책 수립을 유도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도민과 집

행부의 인정을 받게 됐다.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민생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2대 경북도의회에 오른 그는 취임 때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인사 청탁 개입 근절과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받았다

재판부 현명한 판단 존중 정도경영 윤리경영 최선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DGB 금융그룹 측은 10일 ‘갑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볼 것이다”며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은 갑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갑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갑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미경 기자



갑보디아 브로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 “초저출산과의 전쟁”...

초저출산 문제 해결 전부터 팀별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 특명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이철우(사진) 경북 지사가 지난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8일 업무보고를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먼저 전 실국인 전문가들과 토론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였다.

이후 점차 줄어 1970년 4.53(신생아 100만 6645명), 1980년 2.82(86만 2835명), 1990년 1.57(64만 9738명)이었다.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는 64만 89명이 됐고 2010년에는 1.23(47만 171명), 2020년에는 0.84(27만 2337명)에 이르렀다.

실제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됐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

이 지사는 “그때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초단기, 단기, 장기, 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경북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주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 순항 중

현재 토지 보상율 92.8% 사유지보상 새달 마무리

경주시 철도도심재생과가 주도하는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도시 공간을 재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총 사업비 66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565

억원은 토지 매입비, 나머지 100억원은 공사비다.

총 면적은 10만 664.9㎡로 333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국유지는 77개 필지로 면적 1만 1415㎡ △공유지는 44개 필지로 1만 7820.9㎡ △사유지는 211개 필지로 면적 7만 1429㎡로 구분된다.

현재 92.8%(필지 203개, 면적 6만 6353㎡)의 진척률을 보이면서 사유지 보상은 다음 달 말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토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은 오는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내년 12월 완공된다.

윤용찬 기자

의성군,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245억 투자

농가협의체 출범 2025년까지 오상들 한지형 마늘재배단지

의성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농가협의체 가본격 출범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전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가협의체 발대식 및 정례회의가 열렸다.

발대식에는 농가대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세부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토의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대표와 지자체 관계자들 간 긴밀한 소통 방안도 논의했다.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245억 원(국비 167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투입해 의성 사곡면 오상들 일대에 95ha 규모 한지형 마늘재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자동 관수시스템, 생육관리 및 병해충 모니터링, 드론방제, 기상재해예찰, 자율주행키트 등을 활용해 농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노동 집약적, 관행농법 위주 노지 재배방식에 벗어나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가협의체를 통해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군위군, 공공비축미 품종 ‘일품·해담’ 선정

참여농가 57% 일품 30% 영호진미 선호

군위군이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일품’과 ‘해담’으로 최종 선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 결과 ‘일품’과 ‘해담’으로 결정됐다.

심의회에서는 쌀전업농연합회, 군위농협, 팔공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협 및 관계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2025년도 매입품종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에 앞서 벼 재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12월에 10일간 동안 매입품종 선호도 설

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중만생종으로는 참여농가의 57%가 일품, 30%가 영호진미를 선호, 조생종으로는 70% 이상이 해담을 선호했다.

선정 심의회에서도 영호진미, 미소진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군위지역에 적합한 품종 선정을 위한 각 대표들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기존의 일품벼가 병해충에 취약하고 재배에 어려움이 많아 이제는 다른 품종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재배경험과 전체적인 선호도 및 보급공 공급 가능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품’과 ‘해담’ 품종을 최종 선정했다.

농정축산과장은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상주곶감축제 12일 개막

‘2024 상주곶감축제’가 12~14일 상주시 북천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곶감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상주곶감발전연합회가 후원한다.

‘상주 곶트(GOAT)’의 품격을 주제로 불거리, 먹거리가 풍성하다.

임금님신상재현행사, 상주곶감노래자랑,

가수 김연자·박서진·오승근의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상주곶(GOAT)감 라이브커머스, 감-자바스! 상주곶(GOAT)감 특별경매, 상주곶(GOAT)감 마켓, 눈썰매장, 인형극장, 전통놀이체험장, 겨울간식코너, 구이마당 등이 눈길을 끈다.

올해 축제에는 42개 곶감농가부스, 40여종의 먹거리가 준비된 66개 일반부스가 참여한다.

박재성 기자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대구시 백신접종 권고

대구시는 최근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0일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2022년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15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독감(인플루엔자)은 올해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42.1명(52주차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18.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확진자 5000명대가 유지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 대상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구·군 보건소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 내(3월 31일까지) 신규 백신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청도를 걷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청도의 풍경이 주는
평화로움을 눈과 마음으로 거닐어 보세요



운문호반 에코트레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054-370-6114